

<제2캠퍼스>

서울혁신파크, 서울시립대 품고 글로벌 사회혁신클러스터로 진화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신규 조성 계획

시립대 2캠퍼스 ‘교양대학’ 조성
본캠 공간부족, 접근성 제약 해소

교육 평등, 강남·북 균형 등 도모
2022년 첫삽, 2025년 준공 목표

서울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가 혁신과 연구, 교육, 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진화한다. 혁신파크에서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가 생기고 서울시 사회혁신 오픈캠퍼스와 서울연구원이 자리를 잡는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혁신파크 내 3개 신규 교육·연구 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신규 시설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총 11만234m²) 중 3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시유지 약 1만5200m²에 들어선다. 시는 2022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초 준공한다는 목표다. 건립 비용은 1350억~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 캠퍼스’는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일부와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추가한 ‘교양 대학’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립대는 제2 캠퍼스 건립을 통해 동대문 본캠퍼스의 공간 부족 문제와 낮은 접근성 등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서울혁신파크 내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을 주진한다. 어느 시설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설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혁신파크에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만들어진다. 오픈캠퍼스는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혁신자를 양성하는 공간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초구에서 은평구 혁신파크로 자리를 옮긴다. 시는 지난해 8월 연구원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구상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새 연구원은 직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매입해 서울혁신파크를 조성,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현재 245개 단체에 소속된 1300여명이 이곳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은평혁신캠퍼스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조성, 서울연구원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연구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의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원, 학생 등 청년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 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 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최장 23개월’ 뉴딜일자리 4600명 선발

서울시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형 생활시급 1만530원 지급

서울시는 공공일자리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60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7년간 2만5000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경제, 문화, 복

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활동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 53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뉴딜일자리의 일 경험이 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및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한다.

1차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시는 108개 사업에서 787명을 선발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 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사업 부서가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주민등록 전수조사 때 위기·취약가구 찾는다

서울시 3월 20일까지 2만명 동원
위급 상황 확인 시 긴급 지원 등 조치

서울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위기·취약가구 발굴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모든 세대를 찾아가는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공무원이나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올해는 생활 환경을 꼼꼼히 살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취약 가구로 판단되면 당사자가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도록 도와주고, 맞춤형 복

지 서비스도 연계해준다.

위급 상황일 경우 복지플래너가 세대를 즉시 방문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자치구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시는 3월 20일까지 42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 8700명, 통장 약 1만 2000명 등 총 2만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공무원, 통장 총 2만여명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할 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25~26일 연휴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설 연휴 기간인 25~26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기차역과 터미널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귀경객이 몰리는 설 당일(25일)과 다음날인 26일에는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이 늦춰진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각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기차역 5곳(서울·용산·영등포·청량리·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의 운행 시간이 이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000여대는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김현정 기자